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 8. 21.(금)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근로보호를 위한 실태점검 결과 발표

- 29개 시·군 3,093개 사업장 점검...
603개 사업장의 위반사항 663건 시정 지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동력 착취, 브로커 개입 등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단위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점검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관들이 전국 29개 시·군·구의 3,093개 사업장과 계절근로자 7,634명을 방문·면담하여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여부, 근로조건 준수, 숙소 여건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점검 결과, 24개 시·군·구 603개 사업장에서 총 663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인권·근로 분야에서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장소·근로시간 미준수 56건, 타인에게 임금지급 17건, 휴무일 이동·통신 제한 등 14건, 임금체불 5건 등 총 97건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권익침해 사례가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계절근로자 주거 분야에서도 소화기·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 미비 442건, 현행 지침 대비 과도한 숙식비 징수 47건, 냉난방 설비 미흡 29건, 주거시설 부적합 21건, 잠금장치 설치 미흡 20건 등 총 566건의 지적사항이 식별되었습니다.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는 지자체에 점검 결과를 통보하여 지적사항을 즉시 보완토록 요청하는 한편, 위반 정도에 따라 고용주 별점 부과와 계절 근로자 배정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지자체에 대해서는 전담인력 확충 등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 현장 실태와 관리상의 문제를 광범위하게 파악했다”며, “앞으로 현장 관리체계를 보완해 계절근로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지역체류지원과	책임자	과 장	김병철 (02-2110-4217)
		담당자	사무관	최정인 (02-2110-4488)
담당 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책임자	과 장	강성록 (02-2110-4075)
		담당자	사무관	김택균 (02-2110-4076)



참 고**외국인 계절근로 실태점검 결과****□ 점검 개요**

- (기간) '26. 4. 1.(수) ~ 6. 30.(화) / 3개월
- (대상) 29개 시·군(3,093개 사업장, 7,634명 근로자)
- (점검사항) 불법 브로커 개입,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여부, 근로자 숙소 등 생활여건 전반

□ 점검 결과

구 분	지적사항 유형	지적건수
인권·근로	근로계약 위반(근로·휴게시간, 근로장소 등)	56
	타인 명의 임금지급	17
	기타 인권침해(통신·휴무일 제한, 폭언 등)	14
	임금체불	5
	임금통장 제3자 보관	3
	수수료 과다 징수	1
	비공식 관리인(노무관리 대행)	1
	소 계	97
주거 여건	소화기·화재감지기 미비	442
	숙식비 과다 징수	47
	냉난방 설비 미흡	29
	주거 시설 부적합	21
	잠금장치 미흡	20
	온수샤워 미흡	2
	작업장 거리 부적정	2
	기타 편의시설	3
	소 계	566
합 계		663